

2022년 동산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2. 4. 19. ~ 4. 21.(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2. ~ 2022. 2.(2년1월)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산업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II 감사결과

○ 총 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반환	세입조치	계	경장계	훈계	주의
14건	6건	8건	-	4건 (○○○)	2건 (○○○)	1건 (○○○)	-	1건 (○○○)	4건 (13명)	-	-	4건 (13명)

○ 수범사례(우수사례)

- ▶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서비스 확대
-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Ⅲ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14건	시정 6 주의 8	회수 2 추급 1 세입 1 (○○○)	주의 3 (8명)
1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2	공공조달유류 카드사용 포인트 등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	
3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	시정	회수 (○○○)	
4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주의		주의 (3명)
5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	
6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정	주의		
7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8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시정		주의 (4명)
9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10	서면신고용 인감(변경)신고서 수리 소홀	주의		주의 (1명)
11	인감증명서 발급 및 미교부된 인감증명서 파기 부적정	주의		
12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현금 수입금 일일결산 및 납입 소홀	주의		
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시정		
1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주의		

1 물품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200만원 이상의 소액계약에 대하여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용(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담당공무원용(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 구입 등 5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공공조달 유류카드 사용 포인트 등 세입조치 미이행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 납부에 따른 환급금(○○○원)을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보관하여 있으며, 공공조달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2019~2021년 유류 포인트(♠♠♠원)을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연가, 외출 및 병가 사용으로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한 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하지 않고 모두 지급(◆◆◆원 გადა 지급)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죠평범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시는 중앙동 등 29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류비를 일반보상금에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안내 지침’에 따르면 방범대는 운영비 개별 통장을 생성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영수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타카드 영수증 불인정), 순찰근무일지를 통해 방범활동에 따라 운영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2020년~2021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타지역(◆◆시, ●●시)에서 유류를 구입하였고,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2022. 1. 24.일자로 임명된 통장에게 1월분 8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원 과소 지급) 2월분 부터 지급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정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였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2021년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2020년 상반기 운영결과, 2021년 하반기 운영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7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인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함.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명에게 통보기한을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거나,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명에 대하여 최장 ◆일 지연하여 촉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⑧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망,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급대상으로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사망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명의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차적변경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명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았음.

⑨ 공익형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며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농지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〇〇〇〇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0 서면신고용 인감(변경)신고서 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감을 서면신고 하는 때에는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인감지)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감(변경)신고서 및 입증서류(원본)를 제시하되,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고,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서면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증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인감 신고인의 서명(날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완 요구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수리하여 부적정 발급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 인감증명서 발급 및 미교부된 인감증명서 파기 부적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자가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대리인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인감증명이 발급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해당 열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미교부’라고 기재하고, 발급오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해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하며, 잘못 발급(훼손 등)된 인감증명서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위임장에 위임일자 및 위임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보완없이 수리하여 ◆건의 인감증명을 부적정 발급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신청사항 기재 및 대리인 무인 날인 등을 누락하였고, 오류 발급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수입증지 결손처리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현금 수입금 일일결산 및 납입 소홀

-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면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 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익산시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하고,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고,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지연 처리하거나, 서류발급 오류 등에 따른 수입증지를 결손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첨부서류를 부적절하게 첨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 이상 공고(각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를 2회 이상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 사실에 대하여 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거주불명등록자 ♠명에 대하여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회 이상 공고 및 주소 이전 직권조치 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실 등에 의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동산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민원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않아 세입 납부를 처리하지 않았고, 개명의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우수사례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서비스 확대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2022.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
- 사업내용
 -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상담이 필요한 세대에 가정방문 공적 급여 및 <맞춤형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
 - ▶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여 욕구에 맞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추진 계획

- 사업일시 : 상·하반기 1회 이상
- 추진 반 : 2개반 4명(2인 1조, 사회복지담당자 4명)
- 사업내용
 - ▶ 사회복지 민원 서비스 접수
 - ▶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연계 제공

■ 기대 효과

-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복지서비스 실시로 맞춤형복지 구축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맞춤서비스 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마을 동산동”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2월
- 사업대상 :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복지소외계층 가구 및 개인
- 사업내용
 -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좋은 벗 공동방문팀』운영회의 개최
 - ▶ 각 기관의 서비스 상호의뢰 및 정보공유
 - ▶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욕구와 문제 진단
 -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추진 계획

- 회의추진 : 매월 1회
- 회의진행 : 『좋은 벗 공동방문팀』연계회의 및 공동방문
- 구성현황 : 13명(좋은 벗 공동방문팀)
- 사업내용
 - ▶ 『좋은 벗 공동방문팀』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여 각 기관의 서비스 상호의뢰 및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보호체계 구축하여 복지사각 없는 맞춤형복지 강화
 -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여부, 대상자 문제 진단 및 필요 서비스 논의
 - ▶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 실행

■ 기대 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 및 만족도 향상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맞춤서비스 지원. 끝.